

남북경협과 하나의 시장

정형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hgjeong@kiep.go.kr

하나의 시장(single market)은 회원국 간 화폐와 경제정책이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단일의 중앙은행과 공동의회가 설립되는 지역으로, 경제통합을 최종 목표로 한다. 즉, 하나의 시장은 EU와 같이 유로화(Euro)로 화폐를 통합하고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등이 하나의 규칙하에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먼저 남북이 하나의 시장을 추구한다는 것은 북한 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체제이행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현재 북한이 직면해 있는 국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하나의 시장으로의 출발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이 경제적 정상 국가로 인정된 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남북은 그동안 여러 제약하에서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는 남북간 무관세 제도 등을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03년에 정식 발효된 『4대경협합의서』와 『원산지규정합의서』 등 협력을 위한 세부 규칙 등도 마련되어 있다. 물론 세부적인 합의 내용들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하고 실질적 합의 내용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남북이 합의한 무관세 제도는 하나의 시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상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여러 논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현 상황에서 남북이 하나의 시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무관세 제도와 같이 현재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에는, 과거 서독정부가 동독제품에 적용했던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경감 정책 등이 있다. 서독정부 역시 냉전시대에 시작된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서독으로 반입되는 동독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동독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도 서독과 같이 하나의 시장을 위해서 북한제품이 보다 더 많이 그리고 수월하게 남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 제품의 북한 진출 역시 같은 대우로 요구해서 교역량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한 북한제품 반입 시 부가가치세 10% 면제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제품의 남한 반입 시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북한의 철도 및 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으로 기금화하는 것이다.

하나의 시장은 남북이 소비시장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네트워크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소시장의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선·후진국형 협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남한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통일 이전 동·서독의 교역구조 역시 전형적인 선·후진국형 교역구조였다.

서독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독정부에 장기차관을 제공하여 이 차관으로 동독이 서독기업들로부터 생산설비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 설비에 의해 생산된 동독제품을 대부분 서독으로 반입하여 시장의 안정성까지 확보해 주었다. 분단 이후 통일까지 동서독의 교역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교역량이 증가한 분야는 이러한 형태의 산업협력을 한 분야들이었다. 이런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서독 차관으로, 서독의 석유정제설비를 동독이 반입하고 동독은 소련에서 들여온 원유를 서독 설비로 정제해서 서독으로 수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들은 시간이 지남에도 지속적으로 그 교역량이 증가하여 동서독 간 교역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되었다. 서독은 동독기업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저리차관 융자뿐만 아니라 기술도 제공한 바 있다.

남한의 경우도 이처럼 남북한 산업연관성, 생산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정부가 북한에 기술과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하고, 북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한 당국이 투자설비를 남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직접투자를 권장하고 이를 통해 북한산업 설비를 현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다시 남한으로 반입함으로써 시장을 제공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산업 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이 북한 내 철도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현 상태의 북한경제 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북한경제를 남한과

연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고, 남북한의 산업 연계를 통해 북한에서 가공된 상품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방안의 하나가 이미 언급한 남북한 무관세 제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 북한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이미 인정받은 것이다. 한·아세안 FTA를 비롯해 한미 FTA 등에서도 북한은 역외가공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역외가공지역을 활용하여 상품생산 전체 공정의 일부분을 북한에서 가공하거나 최종재화를 생산하게 하여 북한제품들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한국의 FTA 대상국 대상 협상에서 역외가공지역의 부가가치 비중을 우리에게 보다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진전 등 환경 변화 시 우리 정부는 미국이나 EU와의 FTA에서 합의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성공단을 비롯해 북한지역에서 가공 및 생산된 제품들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서독의 경우는 1952년 GATT 회원국으로 가입할 때도 동서독의 교역을 내독거래로 인정받았고,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을 위한 로마조약 체결 시에도 내독교역과 관련된 부속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동서독 교역에 관한 무관세 원칙을 보장받았다. 이러한 서독정부의 노력으로 동독은 동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EC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서유럽 시장에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진출할 수 있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 역시 FTA 협상 시 북한지역의 역외가공지역에 대해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